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2019-nCoV)

'코로나19' 사태의 극복과 사회경제의 안정화 방안

- 일시 | 2020.3.17(화) 오후2시30분
- 장소 | 한국프레스센터 국화실(19F)
- 주최 |  바른사회
KOREAN SOCIETY FOR A BETTER SOCIETY

순 서

■ 사 회

- 전 삼 현 (송실대 법학과 교수)

■ 발 제

- 오 정 근 (한국금융ICT융합학회 회장)

■ 토 론

- 김 원 식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
- 박 인 환 (변호사, 바른사회시민회의 공동대표)
- 박 종 훈 (고려대 안암병원장)
- 송 정 석 (중앙대 경제학부 교수)
- 정 인 교 (인하대 국제통상학과 교수)

■ 종합토론 및 질의·응답

■————— 목 차 —————■

■ 발 제

위기의 한국경제와 비상대책 9
- 오 정 근 (한국금융ICT융합학회 회장)

■ 토 론

- 김 원 식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 23
- 박 인 환 (변호사, 바른사회시민회의 공동대표) 29
- 박 종 훈 (고려대 안암병원장) 40
- 송 정 석 (중앙대 경제학부 교수) 43
- 정 인 교 (인하대 국제통상학과 교수) 45



■ 바른사회 정책토론회

발 제

■ 오 정 근 한국금융ICT융합학회 회장

위기의 한국경제와 비상대책

오 정 근
한국금융ICT융합학회 회장

요 약

코로나19로 인해 한국경제는 수요 공급 양 측면에서 초래되는 전대미문의 위기로 급속히 빠져들고 있다. 글로벌투자기관들에 의하면 한국경제는 금년에 1% 내외, 심할 경우에는 0%대의 성장이 예고되고 있다. 이는 벌써 금년의 한국경제가 0.8% 성장을 기록했던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후 2009년 상황과 유사할 정도의 위기가 초래될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수요측면에서는 이미 마이너스증가율을 지속해 온 투자가 더욱 악화됨은 물론 저조한 수준을 지속해 온 소비가 더욱 위축되고 수출도 더욱 악화될 것으로 예고하고 있다. 설상가상 소재부품과 중간재 수입이 어려워지면서 공급측면에서도 생산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수요 공급 양 측면의 위축은 경제를 더욱 악화시킬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미 문재인정부의 잘 못된 친노조 반기업 경제정책으로 경제가 3년 째 붕괴되는 등 경제체질이 극도로 악화된 상황에서 수요공급 양 측면에서 초래되고 있는 전대미문의 위기로 한국경제가 소생하기 힘든 실물경제위기 금융위기 외환위기 등 복합위기국면으로 추락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으로 악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실물경제 생태계 유지를 위한 다양한 긴급지원을 하되 기본적으로 기업투자 활성화를 위해 과격적인 법인세 인하, 상속·증여세 인하, 투자세액공제 도입, 연구개발세액공제 확대, 투자를 규제하고 있는 각종 규제혁파 등을 시급히 전향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특히 중국경제 환경의 악화로 탈중국하는 한국기업들은 물론 외국기업들 까지도 한국으로 유치할 수 있는 과격적인 대책을 제시해 중국발 위기를 한국경제의 기회로 활용하는 대책을 추진할 필요도 있다.

기업과 가계의 부실은 금융부실로 전이되고 심할 경우 금융위기(banking crisis)로 확산될 우려가 있으므로 금융부실이 심화되지 않도록 금융부실이 증가

되는 징추가 보이면 부실채권매입 등 금융안정을 위한 선제적인 대책이 추진되어야 한다. 폭락하고 있는 주식시장 안정대책으로는 코로나사태로 예상되는 기업수익 악화를 넘어서는 법인세 인하 등 기업환경개선 대책, 원화가치 안정을 위한 대책을 발표해 외국인투자심리를 안정시키는 대책이 중요하다.

외화유동성면에서도 한국의 외환보유액이 우동외채 규모, 이탈하는 외국인투자자금 규모, 한국경제의 정상적인 운용을 위해 경상적으로 수입해야 하는 수입규모 등을 감안하면 약 1천억 달러 이상의 외환보유액이 부족한 실정므로 외국인투자자들이 불안해 외국인투자자금이 단기간에 유출되지 않도록 하는 대책이 추진하고 달러기준 통화스왑인 한미통화스왑과 한일통화스왑을 조속히 체결하여야 한다.

금리를 인하하되 외국인자금 유출 우려는 이미 주요 20개국 (G20)정상회담에서 결의하고 IMF가 추진한 “글로벌 자본이동규칙”, 즉 자본자유화국가에서도 긴급한 금융불안 시에는 ‘거시건전성규제’를 이용해 적절한 자본이동의 안정성 조치를 도모할 수 있다는 국제적으로 인용되고 있는 조항을 최대한 활용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일각에서는 추경을 더 확대해서 소비쿠폰을 지급 (이미 제출되어 있는 추경 11조 7천억 원 중 민생고용안정 소상공인지원 지역경제회복 명목으로 발급되는 상품권 쿠폰 고용장려금 등이 3조 3천억 규모에 달하고 있음) 하거나 심지어 재난기본소득 (2449만 5천 만 명에 월 50만원 씩 지급, 12조 2천억 원 소요)을 지급하자는 주장을 하고 있으나 이미 금년도 512.3조 원 (적자국채 60조 발행) 예산 중 현금성복지예산 86.4 조원이 약 1200만 명이 넘는 국민들에 살포되고 이 중 중복살포도 23조원에 이르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실정에서 다시 추가 막대한 현금살포는 재정위기를 앞당길 우려가 크다. 이미 재정은 적자비율이 -3%가 넘고 국가채무/GDP 비율이 40%를 상회하는 등 위험수위를 넘어서고 있다. 건전재정을 유지해 재정위기가 발발하지 않도록 제정준칙 등 재정건전화 조치 도입이 필요하다.

노동조합도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가입, 5인 미만 사업체 노동자의 노동법 권리보장. 과도한 최저임금 인상, 파업 등 과도한 요구를 자제하거나 미루는 등 비상경제시국을 맞아 기업이 부도나고 일자리를 잃고 고통 받고 있는 국민적 고통에 동참하는 자세를 보여주어야 할 것이다.

아울러 비상경제상황임을 고려해 이상과 같은 비상경제대책을 수립하고 추진할 수 있는 거국비상경제내각 구성이 필요해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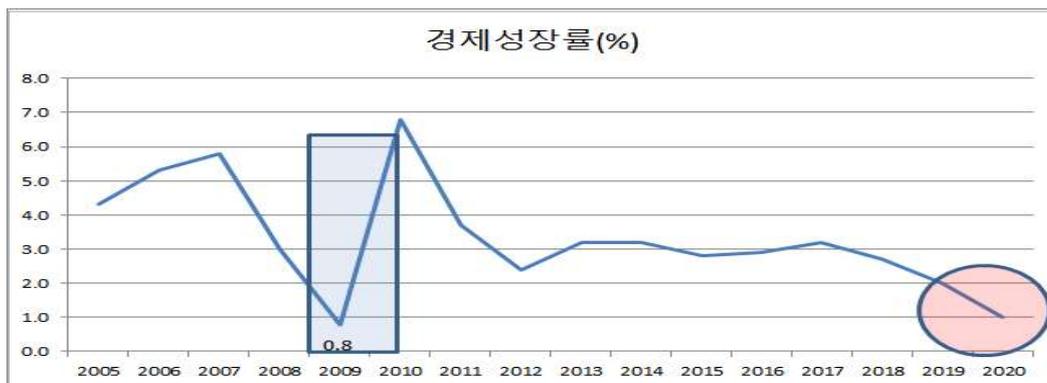
I. 비상경제상황

- 주요 글로벌 경제전망기관들이 금년도 한국경제성장률을 0%대로 급격히 하향전망하고 주가폭락, 원·달러 환율급등 등 금융시장불안이 심화되는 등 한국경제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로 2009년 0.8% 성장을 기록했던 상황과 같은 양상으로 악화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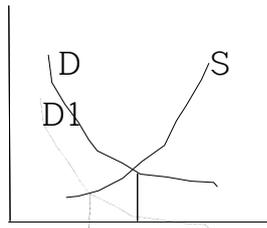
<코로나 이후 글로벌투자은행들의 한국경제성장률 전망>

모건 스탠리	0.4~1.7	코로나 6월까지~4월까지
노무라	0.5~1.8	코로나 6월까지~5월까지
무디스	0.8~1.4	코로나 6월까지~6월까지
골드만 삭스	1.0	
S&P	1.1	
J P 모건	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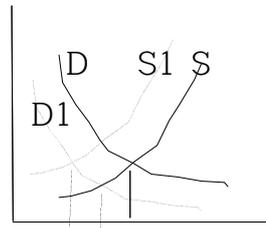
<한국경제 2008~9년 상황으로 갈 것인가>



- 가계부채 (2019년 말 1600조 원)와 중소기업대출(2019년 말 716.7조 원)과 자영업자대출(2019년 말 338.5조 원) (이 중 다중채무자 부채 2019. 6말 508.9조 원) 등 막대한 부채의 급격한 부실로 금융부실 우려가 커지고 있고 과거 수요측면에서 비롯 되었던 위기와는 달리 수요는 물론 글로벌 공급망 붕괴로 인한 공급측면에서도 초래되고 있는 위기로, 심할 경우에는 1997년 금융위기 상황이 재연될 우려도 제기되고 있음.



Y₁ Y₀
<수요 충격>



Y₂ Y₁ Y₀
<수요 공급 충격>

- 외국인투자자금도 급격히 이탈하고 경상수지도 급격히 악화되는 등 외화유동성 측면에서도 외환위기(currency crisis) 발생가능성도 커지고 있음.
- 이미 문재인정부의 잘 못된 친노조 반기업 경제정책으로 경제가 3년 째 붕괴되는 등 경제체질이 극도로 악화된 상황에서 수요공급 양 측면에서 초래되고 있는 전대미문의 위기로 한국경제가 소생하기 힘든 실물경제위기 금융위기 외환위기 등 복합위기국면으로 추락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으로 악화되고 있는 실정임.

II. 비상경제대책

- 한국경제는 더 이상 인내하기 힘든 비상상황에 직면하고 있다고 판단됨. 더 이상 돌아오기 힘든 상황으로 악화되기 전에 정파를 초월한 다음과 같은 거국적인 선제적인 비상대책을 시급히 강구해 추진해야 할 것으로 판단됨.

1. 실물경제대책

○ 실물경제 생태계 유지를 위한 긴급지원

- 코로나사태의 장기화로 부도위기에 직면하고 있는 음식점 도소매업 관광 여행업 저가항공사 등 중소기업과 영세자영업의 생태계가 붕괴되지 않도록 영업기반과 고용 유지를 위한 (1) 재정자금지원, (2) 신용보증확대, (3) 한국은행 금융중개지원대출 등 과감한 금융지원과 (4) 세제지원

- * 긴급한 운용자금의 경우 신용보증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자금지원이 실기하지 않도록 조치.

- 코로나사태로 수출 판매가 급감해 가동률이 급락하거나 해외부품조달이 어려워 생산활동이 급격히 위축되고 있는 중견기업과 대기업들에 대해서는 (1) 긴급운영자금지원 (2) 긴급부품조달을 위한 외화유동성 등 자금지원 (3) 긴급부품조달 수입선 다변화 지원 (4) 소재부품개발자금 지원 (5) 필요할 경우 원활한 구조조정 지원 (6) 금융부실 심화 방지대책 등을 추진해야 할 것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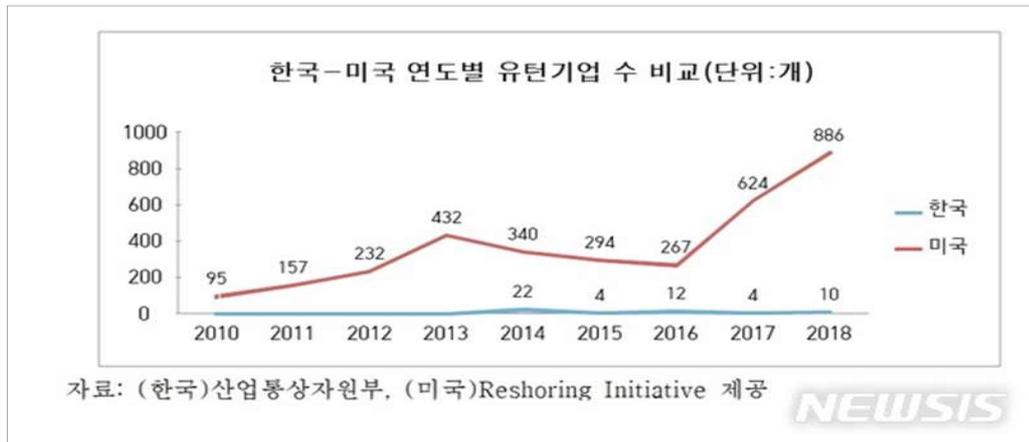
* 경제생태계는 한 번 붕괴되면 회복이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에 현재 한국 경제의 재정사정을 고려해 볼 때 제한된 자원의 긴급 추경은 주로 위기의 터널을 통과하는 과정에서 경제생태계가 붕괴되지 않고 고용을 가능하면 최대한 유지하는 데 사용되도록 하여야 하며 현금살포 등 포퓰리즘 정책에 추경이 사용되는 일은 없도록 해야 할 것임.

○ 실물경제 활성화 대책

- 수요측면에서 이미 마이너스 증가율을 지속하고 있는 투자 수출 소비 증가율의 마이너스 폭이 커지고 공급측면에서 소재부품수입 중간재수입이 모두 어려워지고 있는 등 수요 공급 양 측면에서 동시에 위기가 발생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하고 있음.

- 기업투자 활성화가 되어야 고용이 늘어나고 그 결과 소비가 활성화되어 경제가 선순환될 수 있으므로 기업투자 활성화를 위해 파격적인 법인세 인하, 상속·증여세 인하, 투자세액공제 도입, 연구개발세액공제 확대, 투자를 규제하고 있는 각종 규제혁파 등을 시급히 전향적으로 추진해야 할 것임.

- 특히 중국경제 환경의 악화로 탈중국하는 한국기업들은 물론 외국기업들 까지도 한국으로 유치할 수 있는 파격적인 대책을 제시해 중국발 위기를 한국경제의 기회로 활용하는 대책을 추진할 필요도 있음.



2. 금융안정대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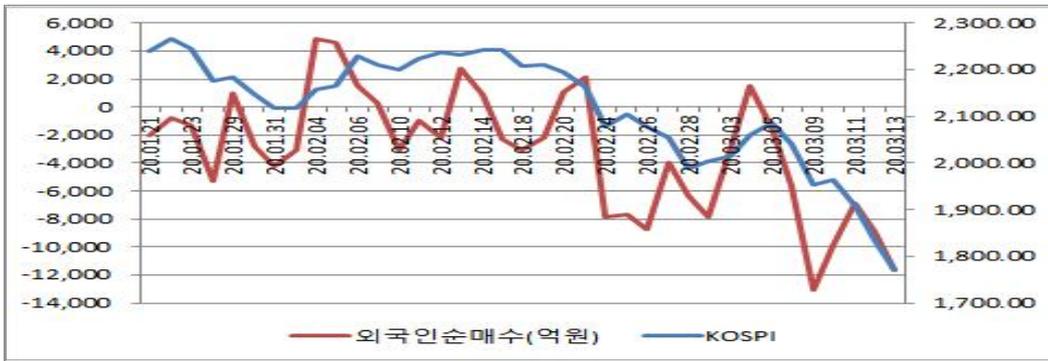
○ 금융부실 심화와 금융위기 방지를 위한 대책

- 기업과 가계의 부실은 금융부실로 전이되고 심할 경우 금융위기 (banking crisis)로 확산될 우려가 있으므로 금융부실이 심화되지 않도록 금융부실이 증가되는 징후가 보이면 부실채권매입 등 선제적인 대책 추진.
- 기업부실이 심화되면 채권가격이 폭락하므로 채권시장을 면밀히 모니터링 하여 채권안정기금 등 채권시장 안정대책을 선제적으로 추진.

○ 주식시장 안정대책

- 주가급락은 외국인투자자금 유출을 통해 원/달러 환율 상승을 초래함.
- 주가급락은 기본적으로 (1) 기업수익이 악화될 것이라는 예상에 따른 주식투자수익률 하락 전망, (2) 원화가치가 하락할 것이라는 환차손 우려에 따른 외국인투자자의 이탈이 중요한 원인임.
- 대책으로는 공매도금지 등 반시장적인 대책보다는 첫째, 코로나사태로 예상되는 기업수익 악화를 넘어서는 법인세 인하 등 기업환경개선 대책을 발표하고, 둘째, 원화가치 안정을 위한 대책을 발표해 외국인투자심리를 안정시키는 대책이 중요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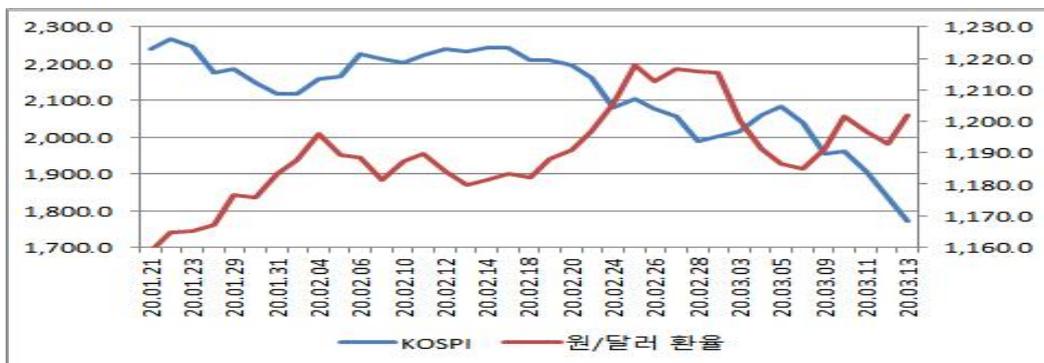
<외국인순매수와 주가>



<외국인순매수와 원/달러 환율>



<주가와 원/달러 환율>



3. 외환시장안정대책

○ 외화시장 안정과 외화유동성 확보 대책

- 원/달러 환율이 1200원을 넘어서는 등 급등하는 심상치 않은 모습을 보이고 있음. 근년 들어 동조화현상을 보여 오던 원/달러 환율과 위/달러 환율의 동조화현상이 깨어지면서 원/달러 환율이 급격히 상승하는 모습

을 보이고 있는 점에 유의해야 함.

- 이는 한국 원화가 중국 위안화 보다 더 불안해 질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는 것일 수도 있다는 점에서 유의할 필요가 있음.

<원/달러 환율과 위안/달러 환율>



- 외화유동성면에서도 한국의 외환보유액이 적지는 않지만 1년 내 만기가 돌아오는 유동외채 규모, 이탈하는 외국인투자자금 규모, 한국경제의 정상적인 운용을 위해 경상적으로 수입해야 하는 수입규모 등을 감안하면 약 1천억 달러 이상의 외환보유액이 부족한 실정이므로 외국인투자자들이 불안해 외국인투자자금이 단기간에 유출되지 않도록 하는 대책이 중요함.
- 외국인투자자들의 투자심리 안정에는 달러기준 통화스왑인 한미통화스왑과 한일통화스왑이 중요하므로 정부는 조속히 한미통화스왑과 한일통화스왑을 체결할 것을 촉구함.

○ 금리 인하와 금융시장 및 외화유동성 시장 안정

- 한국은행은 실물경제 추락에 대응해 선제적으로 금리인하를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임. 금리결정의 중요변수인 GDP갭률 (실제GDP와 잠재GDP의 갭률), 물가갭 (물가상승률-물가안정목표:2%)는 이미 장기간 마이너스를 지속하고 있어 실물경제만 고려하면 금리인하 요인이 누적되고 있는 상황임.
-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리인하에 주저하고 있는 이유는 첫째, 원화가치 하

‘코로나19’ 사태의 극복과 사회경제의 안정화 방안

락에 따른 외국인투자자금 유출과 그에 따른 원화가치 급락 (원화가치 급락시 원화기준 외채상환 부담 증가) 우려, 둘째, 유동성 공급에 따른 부동산가격 상승 우려, 셋째 가계부채 증가 우려 등임.

- 외국인자금 유출 우려는 이미 주요 20개국 (G20)정상회담에서 결의하고 IMF가 추진한 “글로벌 자본이동규칙”, 즉 자본자유화국가에서도 긴급한 금융불안 시에는 ‘거시건전성규제’를 이용해 적절한 자본이동의 안정성 조치를 도모할 수 있다는 국제적으로 인용되고 있는 조항을 최대한 활용 하도록 할 필요가 있음.
- 부동산가격 상승과 가계부채 증가 우려는 지금은 실물경제가 위기 상황으로 추락하고 있는 비상경제상황이라는 점을 인식하고 대응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됨. 즉 위기 시에는 부동산가격이 추락할 우려가 크고 한국에서 주택담보대출의 상당부분이 주택구입용 뿐만 아니라 사업자금마련 전세금마련 등 타용도라는 점을 감안해야 할 것임. 고용이 악화되면 가계부채는 오히려 증가하기도 한다는 점을 감안해야 할 것임.

4. 재정안정대책

○ 재정안정과 추경 대책

- 일각에서는 추경을 더 확대해서 소비쿠폰을 지급 (이미 제출되어 있는 추경 11조 7천억 원 중 민생고용안정 소상공인지원 지역경제회복 명목으로 발급되는 상품권 쿠폰 고용장려금 등이 3조 3천억 규모에 달하고 있음) 하거나 심지어 재난기본소득 (2449만 5천 만 명에 월 50만원 씩 지급, 12조 2천억 원 소요)을 지급하자는 주장을 하고 있음.
- 그러나 이미 금년도 512.3조 원 (적자국채 60조 발행) 예산 중 현금복지 54.3조원, 사실상 현금을 살포하고 있는 단기 알바, 노인일자리 등 일자리예산 26.8조 원, 고교무상교육 1.3조원, 유아교육비보육료지원 4조 316억원 등 현금성복지예산 86.4 조원이 약 1200만 명이 넘는 국민들에 살포되고 이 중 중복살포도 23조원에 이르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실정임.
- 이런 가운데 다시 추가로 막대한 현금살포 (추경 3조 3천억, 재난기본소득 2449만 5천 만 명에 12조 2천억 원)는 이미 근로소득보다 정부이전

소득이 많은 하위소득계층에 그 폭을 더욱 확대시켜 근로의욕을 저하시킬 우려가 커지고, 재정위기를 앞당길 수도 있는 재정지출을 재정승수효과가 큰 재정투자지출 보다는 재정승수효과가 거의 제로인 것으로 연구 결과가 나오고 있는 이전지출 중심으로 지출하는 등 많은 문제점을 수반하고 있음.

- 피해 중소기업과 자영업 지원, 고용유지 지원도 가능하면 현금 중복살포 부분을 면밀히 재검토하는 등 재정을 알뜰하게 사용하는 노력을 한 후에 부족분에 대해서는 적자국채발행으로 미래세대에 재정부담을 이전할 수밖에 없는 추경을 편성하는 자세가 필요한 실정임.
- 더욱이 추경으로 인해 금년에 벌써 국가채무/GDP 비율이 40%를 넘어서고 관리재정수지/GDP 비율이 마이너스 3%를 넘어서는 등 재정건정성이 위험수위를 넘어서고 있는 상황에서 이러한 현금살포 주장은 결국 미래세대에 재정위기 부담을 지우자는 주장이나 다름 없음.

<위험수위를 넘어서고 있는 재정적자>



<위험수위를 넘어서고 있는 국가채무>



- 건전재정을 유지해 재정위기가 발발하지 않도록 제정준칙 등 재정건전화 조치 도입이 필요하다.
- * 미국 일본 독일 등 선진국에서는 위기에 처한 기업을 지원하는 정책이 도입되거나 주장되고 있고 특히 미국에서는 기업유턴지원정책이 대대적으로 도입되어 2017년 624개, 2018년 886개 기업이 유턴해 엄청난 일자리를 창출하고 있는 반면 한국에서는 재정건전성이 위험수위를 넘어서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현금살포 주장이 나오고 있는 포퓰리즘 일변도 주장이 난무하고 있는 안타까운 실정임.

5. 노동시장안정대책

- 지금은 전대미문의 위기가 다가오고 있는 비상경제시국임. 독일에서 통일 후 경제가 장기불황에 돌입하자 좌파정당인 집권 사회당이 앞장서서 ‘하르츠개혁’ 등 강도 높은 노동개혁을 통해 독일 경제를 반석위에 올려놓기도 했음. 과도하게 경직성이 높은 것으로 국제기구 등에서도 지적되고 있는 한국의 노동관계법을 개정하는 노동개혁 추진이 시급한 과제임.
- 노동조합도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가입, 5인 미만 사업체 노동자의 노동법 권리보장. 과도한 최저임금 인상, 파업 등 과도한 요구를 자제하거나 미루는 등 비상경제시국을 맞아 기업이 부도나고 일자리를 잃고 고통 받고 있는 국민적 고통에 동참하는 자세를 보여주어야 할 것임.

III. 비상경제대책 수립 추진을 위한 거국비상경제내각 구성

- 지난 3년간 연속적으로 붕괴되어온 한국경제의 참상을 고려해 볼 때 정파를 떠나 현 정부의 경제팀으로는 과연 다가오고 있는 전대미문의 경제위기를 극복해 낼 수 있을 것인지 확신하기 어려운 실정임.
- 지금 다가오고 있는 경제위기는 국난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의 전대미문의 경제위기이므로 이를 극복해 한국경제를 더 이상 침몰시키지 않고 국민들의 경제적 생존을 지켜 줄, 정파를 떠나 오직 경제회생만 전념할 수 있는 거국비상경제내각 구성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바임.

■ 바른사회 정책토론회

토론

- 김 원 식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
- 박 인 환 변호사, 바른사회 공동대표
- 박 종 훈 고려대 안암병원장
- 송 정 석 중앙대 경제학부 교수
- 정 인 교 인하대 국제통상학과 교수

‘코로나19’사태의 극복과 사회경제의 안정화 방안
- 노동·복지의 관점 -

김 원 식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

요 약

세계가 경제사회적으로 단일화됨을 의미하는 글로벌사회에서 코로나사태는 그동안 무시되었던 국가의 보건의료 및 방역시스템의 중요성을 일깨우는 사건의 하나임. 각국이 보건방역시스템을 체계적으로 갖추지 않으면 ‘왕따’가 됨을 보임. 이는 사실상 글로벌경제에서 퇴출되는 것을 의미하고, 우리나라와 같은 수출중심국가의 국민경제 위축을 낳음. 이러한 사태는 조류독감이나 돼지콜레라 등에서 예견된 것임.

제2, 혹은 제3의 코로나사태에 대비하기 위하여 가장 효율적인 보건방역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선결되어야 하고 세계에 전염병청정국임을 입증해야 함. 따라서 보건의료시스템의 규제완화와 의료기술의 확산 등에 정책적 역량을 강화해야 함. 정부의 보건의료 기능을 보건복지부에서 분리하여 보건부로 함.

코로나로 무너진 사회경제의 생태계를 보전하기 위해서는 고용안정이 최선의 대책인 만큼 기업들에 대한 고용안정과 함께 규제완화를 통하여 새로운 사업기회를 적극적으로 개방해야 함.

취약계층의 재활 기회가 사실상 붕괴된 만큼 특성별 지원정책을 강화해야 함. 노인계층에 대하여는 상시 긴급구호시스템을 구축하고, 청년실업자들에 대한 취업보너스 등 취업활동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야 함. 저소득층에 대하여는 이들에 대한 철저한 행정지원시스템을 구축하면서 실질적인 복지지원이 가능하도록 함.

I. 개요: 코로나19사태의 의의 및 경제 현황

○ 정부의 실시간 상황판(<https://coronaboard.kr/>)에 따르면 15일 기준 전 세계 확진자가 16만2천명, 사망자 6천명임. 우리나라에서는 확진자 8100명, 사망자 75명임.

- 중국 우한에서 코로나19발병 확진일인 2019.12.31.이후 지속적으로 확산되어 3월14일 WHO에서 팬더믹(Pandemic) 선언함.

- 대구 경복을 중심으로 한 지역적 피해 심각함.
 - 자영업 및 중소기업 등 기업 및 종사근로자들의 생업 위기 심각함.
 - 전국, 2월 개인파산신청 전년 동월 대비 19.2% 증가, 법인파산신청 12.6% 증가함.

- 전국적으로는 거의 모든 경제흐름의 위축으로 기업의 휴업으로 인한 실업자 증가 및 구조조정 진행 중임.
 - 실업급여 지급액 급증함.

- 금융부문으로서 가계부채 급증하고 있음. 자영업 및 중소기업 등에 대하여 자금지원, 융자금 만기연장 등의 조치가 우선되어야 함.

- 빈곤층 증가 함.
 - 노인 빈곤층을 위한 공공일자리 사업 중단으로 사실상 57만여명의 노년 휴직자 급증함.
 - 소주성으로 인한 대기업 정규직근로자를 제외한 근로자들의 피해가 가중됨.
 - 경남 및 서울, 경기도의 자치단체장들이 요구하는 기본소득제 요구는 빈곤문제를 해결 못함.

- 청년실업 증가
 - 2020년도 취업시장 사실상 개점 휴업상태임. 유희자원의 낭비임.
 - 청년수당 등의 현금지원은 실업기간만 연장시킴.

- 중산층의 붕괴가 심각해짐. 가계부채가 늘면서 파산위험이 증가함.
 - 분배중심의 경제정책으로 근로자들의 소득창출 및 사업기회 위축됨에 따라 새로운 중산층의 유입이 저조한 상태에서 코로나사태는 중산층 재건의 악재가 됨.

- 기존의 경제애로에 코로나사태가 가중되면서 사회경제적 코로나사태로 진전됨.
 - 코로나발병시의 초기대응 실패가 사태를 악화시킴.
 - 특히, 이에 대응하기 어려운 취약계층의 피해가 더 큼.
 - 우리나라의 풍부한 의료자원에도 불구하고 정책의 실패로 사태가 증폭됨.

II. 코로나19 현상: 코로나 경제

- 재택근무 증가함.
 - 무급휴직, 실직 등으로 가구 생계 위협 중임. 특히 비정규직 시간제근로자 심각함.
- On-line 구매 증가함.
 - Off-line 근로자의 수요 감소함.
 - 직무중심의 근로환경 촉진함.
- 원격의료의 활성화
 - 한국은 일시적으로 원격의료를 허용하고 있으나 선진국은 핵심적 제도로 정착시킴으로써 의료자원의 효율적 활용에 기여함.
- 해외 실물 및 서비스 교역시장의 위축과 원상회복 가능성 낮음.
 - 국가간 supply chain의 재구성에 시간이 소요됨.
 - 생산 및 서비스 기술의 개발에 집중해야 함.
 - 해외 생산기지의 생산 위험관리를 위한 역내외 재분산을 추진해야 함.

III 대책: 제2의 코로나사태에 대비한 사회경제시스템 구축

- 전체적 틀인 틀은 거시적 대책과 부문별 대책이 병행되어야 함. 즉, 건강, 사회, 경제적 생태계의 유지와 취약계층의 특성별 지원에 집중해야 함.
- 건강 및 방역생태계의 유지는 건강보험 및 의료시스템의 개혁으로 가능함. 의료정책을 public-private mix의 산업정책으로 보아야 함.
 - 보건복지부에서 보건의료부문을 보건부로 분리함.
 - 광역의료체계의 독자적 보건의료 체계구축: 대형병원의 수도권 집중 억제 등,
 - 지역 의원 중심의 보건 및 의료 관련 원격의료시스템의 구축
 - 4차산업혁명 도구에 기반한 의료기술 개발 및 지원
- 사회생태계는 중산층을 중심으로 한 자발적/독립적 자생능력의 확보임.
 - 공사 사회보험시스템의 구축
 - 국민건강보험 질병수당의 도입: 민영의료보험은 질병수당의 역할 분담 중임.

- 경제적생태계는 노동시장을 중심으로 한 유연화와 안정화가 필요함.
 - 비정규직 및 시간제 근로자의 실질적 증가에 따라 향후 비정규직 중심의 노동시장 시스템 구축 및 사회안전망의 보험성 강화
 - 실업부조제도의 도입
- 취약계층의 특성별 지원은 저소득층의 생계보호, 청년실업자 보호, 노인층의 건강 및 생활안정 등임.
 - 저소득층을 위한 틈새없는 행정지원시스템을 강화하면서 서비스 중심의 기본생계 지원시스템
 - 청년 실업자들에 대한 취업 촉진 보너스 도입
 - 노인들을 위한 상시 긴급구호시스템 구축

* 참고자료

본고는 Hansun Brief ['코로나19' 추경: 멀리 보고 짜야 한다.] 통권125호

1. '코로나19' 추경의 필요성

지난해 말 중국 우한에서 발병한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이 확인된 지 석 달이 되어간다.

정부의 실시간 상황판(<https://coronaboard.kr/>)에 따르면 3월 15일 기준 전 세계 확진자가 16만2천 명이고, 사망자가 6천 명을 넘었다. 우리나라는 확진자가 8,100명이고, 사망자가 75명이다. 이제 발병 현황도 완전히 전도되어 진원지가 중국이 아니라 유럽이 되었다. 유행이 세계로 확산하는 상황이고, 과거와 달리 완전 개방형 글로벌 사회에서 바이러스를 서로 주고받는 상황이 되었다. 이런 상황에서 현재의 위기는 상당 기간 지속될 수밖에 없다.

정부가 11조7천 억원의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심의하고 있다. 하지만 단순히 땀질식의 예산으로는 현재의 질병관리 및 경제위기를 해결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게다가 추경은 단순히 우리가 처한 현재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응급조치에 불과할 수밖에 없다는 점이다. 이미 우리의 의료 환경은 '코로나19'를 관리하는데 한계에 도달해 있어서 향후의 상황이 아무리 낙관적이라고 해도 확진 추이에 따라서 전체 의료시스템까지도 비상체제로 전환되어야 할지 모른다.

의료와 관련되어 반드시 수반되는 또 다른 현상은 민간인들의 생계와 연관 된다는 점이다. 한 가구에 '코로나19' 감염자가 발병해서 환자가 생기면 당장 진료비가 들어가고, 환자를 관리하기 위한 가족 간병이 필요하게 된다. 더욱이 가구주가 환자가 되면 가구원 전체의 생계가 위협받게 된다. 하물며 이번과 같은 전염병의 경우는 경제 흐름이 완전히 끊어지게 되는 상황이 되어서 환자가 아니더라도 일반 직업인들까지도 실업 및 매출 감소로 가구까

지 위기 상황에 직면하게 된다. 이에 따라 가장 큰 피해를 입는 계층은 당연히 하루 벌이 저소득층이고, 근로자들이라면 중소기업근로자이거나 비정규직이 된다.

따라서 추경의 편성에 있어서도 이러한 관점을 보다 명확히 하고 발병 추세에 따라 2차, 3차 추경을 더 해야 한다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 이러한 추경은 사실상 유례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정부는 여여를 막론하고 국회에 보다 협력적인 자세를 취해야 한다.

2. 추경 편성의 원칙

우선, 올해 2020년도 예산을 재검토해 불요불급한 지출을 전년도 기준으로 동결하고, 남은 예산액을 실질적인 '코로나 예산'으로 전환해야 한다. 올해 예산은 513조원 규모로, 총지출이 지난해보다 9.1% 많은 42조7,000억원 증액됐다. 총지출 증가세가 작년 경제성장률 2%의 약 4.5배로 사실상 국민들의 부담능력에 넘치는 증액이었다. 내용 면으로 보면 보편적 복지 확대를 위주로 한 보건·복지·고용예산이 약 20조 원 늘었다. 기초연금 수급액의 증액, 실업급여의 인상 및 지급연장,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하지 못한 지역사업들과 이해할 수 없는 선심성 사업들이 대거 포함됐다. 더구나 올해 예산안은 공직자수사처 설치, 선거법 개정, '조국 수호' 등으로 국회가 파행인 상황에서 여당+여권 3당이 밀어붙인 것이다.

둘째, 예산을 피해지역인 대구와 경북지역 및 그들의 실질적 피해자에 집중해야 한다. 또한, 환자를 돌보고 있는 의료진의 지원에 예산을 우선적으로 투입해야 한다. 감염되는 순간 상당 기간을 진료해야 하는 그들의 희생이 없으면 '코로나19' 사태는 끝나지 않는다. 가장 효율적이라는 우리나라 국민건강보험의 가장 큰 한계인 상병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상병수당은 확진자나 격리자 가족들의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그리고 이는 다른 지역에도 확대 적용해야 한다.

셋째, 추경은 사실상 정부가 현금지원을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피해를 입은 지역경제를 환원시키는데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지역의 기업이나 자영업에 대한 전폭적인 금융지원을 해야 한다. 한편, '코로나19' 사태가 지나가더라도 노사 환경 문제를 포함한 다양한 규제를 풀어서 조기 회복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넷째, 제한된 세입으로 앞으로 더 필요할지 모를 추경 재원을 마련하기 위하여도 '코로나19 공채'를 발행해야 한다. 코로나 공채는 기준이자율에 1-2%포인트를 더한 것으로 국민들에게 공모한다. 이는 현재의 남아도는 시중자금을 흡수하면서 국민들이 힘을 합하여 위기를 극복하게 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단, 이 자금은 자본시장에서 운용되고 회수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3. '코로나19' 사태를 의료체계 개혁의 기회로 활용

지금 경제를 마비시키고 있는 '코로나19' 사태의 본질은 의료시스템이다. 장기적 관점에서 이번 코로나 사태는 우리나라 의료체계를 개혁하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 수도권에 집중된 의료시스템을 전국에 분산 배치해서 질 높은 상급병원에 대한 접근도를 높여야 한다. 적어

도 광역자치단체는 모든 질병을 스스로 관리할 수 있는 의료 시스템을 갖추어야 한다. 4차 산업혁명의 의료기술이 급속히 증가하고 있는데 의료시스템은 대면 진료를 의무화하고 모든 병원은 공공병원으로 평준화하려는 후진적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원격의료 및 특화된 영리병원의 존재도 인정하는 의료개혁이 없으면 또 다른 더 무서운 코로나바이러스의 희생양이 될 것이다.

추경예산의 심의를 담당하고 있는 국회는 새로운 국회의원 선거를 치러야 하는 국면에 있다. 선거에 나서는 의원은 선거운동으로, 선거에 나서지 않는 의원은 힘이 빠지고 짐 싸느라고 바쁠 것이다. 추경심의회가 제대로 될지 우려된다. 이들에게 국민들의 피땀 어린 세금으로 거두어진 예산을 절감하도록 요구하는 것은 무리일 수 있다. 그래도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는 공직자로서 최선을 다해주길 기대해 본다.

'코로나19', 한국의 경제 위기와 법적, 사회적 대응

박인환
변호사, 바른사회시민회의 공동대표

1. 경제위기와 사회갈등

1) 경제위기 상황과 사회통합의 필요성

0 경제위기의 실상 :

경제성장을 둔화, 국민소득 감소, 소득격차 심화, 고용을 감소(40대 실업률 증가)

0 경제위기에 따른 사회갈등의 심화와 사회통합의 요구

0 사회통합은 기능적 상호관계에 의해 이루어진 다양한 사회 집단들이, '국가의 정체성'을 기준으로 하나의 통일된 단위를 형성하여 사회 구성원들로 하여금 갈등을 해소하고 공동체에 대한 귀속감(정체성)을 갖도록 하는 것임.

0 이질적이고 다양한 사람들로 구성된 사회가 정체성을 가지고 사회적 통합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구성원 사이에 누적된 사회적 갈등이 극단적으로는 폭동과 소요로 나타나게 됨.(광우병 사태, 세월호 사태, 소위 촛불혁명 사태)

0 사회통합지수

* 2014년 『동아일보』- 리서치앤리서치(R&R) 여론조사 결과

- 한국 사회의 사회통합지수는 3.97점(10점 만점 기준)을 기록해 위험 수준임.
- 국익은 뒷전인 채 정쟁에만 몰두하는 정치권, 일자리와 연금을 둘러싼 세대 간의 대립, 영남과 호남의 해묵은 지역 갈등, 보수와 진보의 치열한 이념 경쟁 등 다양한 갈등 요인이 사회통합을 저해하는 것으로 나타남.
- 응답자의 43.8%가 사회통합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정치 갈등을 꼽음.(갈등을 해결하는 것이 정치의 목적인데 오히려 정치가 갈등을 부추기고 있음)
- 특히 광우병, 세월호, 촛불 사태를 계기로, 중요한 사회문제가 터지면 이념상

보수와 진보로 나라가 둘로 갈라지는 현상이 우려됨.(보수와 진보의 대립)

- * 이렇다 보니 2014년 우리나라의 사회통합지수는 OECD 30개국에서도 최하위권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사회통합의 중요 요소인 '관용'과 '배려'는 거의 꼴찌 수준임.

2) 사회갈등, 특히 정치적 이념갈등의 심화

0 사회통합의 반대 개념으로서 사회갈등은, 사회 변동 과정에서 개인이나 집단 간에 의견이나 이해관계의 대립이 심화된 것으로 공동체를 파괴하여 사회통합을 저해하는 요인(그러나 사회의 문제점을 드러내고 개선함으로써 사회발전에 기여하는 면도 있음.)

0 사회갈등의 발생 원인으로는 사회적 희소가치를 둘러싼 이해관계의 차이와 가치관의 차이를 들 수 있으며, 사회갈등의 양상은 노사갈등, 계층갈등 등 산업화에 따른 갈등과 정보화에 따른 갈등, 세대갈등, 가치관 갈등 등이 있음.

0 특히 우리나라의 사회갈등 양상은 산업화에 따른 노사갈등이나 계층갈등도 우려되지만, 다른 선진국에서는 보기 어려운 남북의 이념적 대치(자유민주주의, 공산독재 전체주의)에 따른 이념갈등이 모든 사회갈등의 근저에 깔려 있으므로 더욱 복합적인 양상을 보이고 있음.[이념갈등의 첨예화]

0 이에 따라 우리나라 사회갈등의 특징은, 체제 변혁, 즉 혁명을 꿈꾸는 이념이 정치, 경제, 노사, 문화, 세대, 빈부 갈등의 근원지로서 북한을 추종하며 체제 변혁을 꾀하는 종북 좌파이념을 바탕으로 하는 세력들이 끊임없이 사회 모든 분야의 갈등을 야기, 증폭시키고 있음.(광우병, 세월호, 촛불 사태 등)

* 매일경제신문 설문조사(2017. 1. 11.자)

- 한국 사회는 경제 분야에서 진보적, 사회 분야에서 보수적 이념 편향을 보이지만 막상 좌우지간에 간극이 그리 크지 않음.
- 그러나 안보 분야만큼은 이념 차이가 뚜렷한데, 사실상 북한 문제를 비롯한 국방·안보에 대한 입장에서 보수와 진보가 극명하게 갈라지는 현상을 보임.
- 보수는 "사드를 배치해 북한을 견제하고 군사력을 키워 안보를 확충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 반면에 진보는 "개성공단 가동을 즉각 재개하고 북한과 외교를 통해 평화를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함.

0 사회갈등지수(Social Conflict Index)

사회갈등지수는 노사갈등, 계층갈등, 세대갈등, 남녀갈등, 지역갈등 같은 그 사회에 존재하는 모든 갈등을 합쳐 수치로 표현한 것으로, 국가의 민주주의 성숙도와 정부 정책의 효율성이 낮을수록 높아지고, 소득 불균형, 정치적 불안정이 높을수록 사회갈등지수가 높아짐.

* 사회갈등지수의 계산

사회갈등지수 = $[(\text{지니계수} + \text{정치적 안정}) / 2] / [(\text{법치주의} + \text{정책효율성}) / 2]$

* 2013년 11월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산하 (사)갈등해소센터가 한국리서치에 의뢰한 ‘2013 한국인의 공공갈등 의식조사’ 결과

- 국민 10명 중 9명은 “한국 사회에서 집단 간 갈등이 심각하다”고 인식함.
- 가장 심각한 갈등 집단으로는 ‘진보와 보수 세력’이 89.3%로 가장 높았음.

* 2016년 11월 현대경제연구원의 조사결과

- 2009~2013년 한국의 평균 사회갈등지수는 OECD 29개국 중 7위로 상대국들에 비해 높은 수준임.(OECD 국가 중 사회갈등지수는 터키가 가장 높고 한국은 칠레에 이어 7번째로 높은데, 한국은 OECD 평균 0.51을 상회하는 0.62 수준)

- 특히 한국의 사회갈등지수는 악화되고 있을 뿐 아니라 OECD 회원국 평균과의 격차도 확대되고 있음.

- 이처럼 사회적 갈등관계에 있는 이해집단들이 사적 이익을 취하는 과정에서 사회적 비용이 발생하게 되고, 자원배분의 비효율성을 유발하여 사회후생을 감소시킴.

(사회갈등 비용 한해 약 3조원 추산, G7 국가 수준으로 갈등이 완화되면 연 3% 대 잠재성장을 증대 가능)

3) 사회갈등의 배경

0 산업화, 민주화의 급속한 진전에 따른 사회갈등의 심화

0 짧은 기간, 양적 성장의 결과(압축성장)

0 1인당 국민총소득(GNI)

1953년 69달러에서 2015년 33,434달러로 증가(약 485배 증가)

0 2019년 선진국의 기준으로 여겨지는 '30-50클럽' 세계 7번째로 가입 달성
(미국·독일·영국·일본·프랑스·이탈리아 및 식민지 경험국으로는 최초)

0 독자적인 내수시장을 갖춘 경제대국으로 선진국으로 가는 지표

* 과거 2012년 세계에서 7번째 '20-50클럽' 가입

* 2020. 3. 3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2019년 4/4분기 및 연간 국민소득(잠정)'에 따르면 작년 달러화 기준 한국의 1인당 국민총소득(GNI)은 3만2047달러로 4년만에 전년(3만3434달러)보다 4.1%(1387달러) 감소하여 30-50클럽 탈락 위기에 봉착

0 무역규모는 1962년 4억8,000만 달러(제1차 경제개발5개년계획)에서 지난 2011. 12. 5. 처음으로 연간 무역규모 1조 달러 달성(약 2000배 증가)

4) 압축성장의 부작용과 가치관의 혼돈

0 공통된 가치관과 도덕기준이 상실된 아노미(anomie) 현상

0 아노미 현상은, 사회적 가치관의 붕괴로 인하여 구성원들이 겪게 되는 혼돈 상태로 '사회해체 현상'의 원인이 됨.

0 급속히 발전하는 물질 문화와 비교적 완만하게 변하는 비물질 문화 간에 변동속도의 차이에서 생겨나는 사회적 부조화로 전통적인 규범과 가치관이 무너지고 이를 대체할 공통적 규범과 가치관이 아직 정립되지 못한 혼란과 무규범 상태 지속.

* OECD 국가 중 자살률 12년째 1위(2015년 인구 10만명 당 26.5명 : 특히 노인층 자살율의 증가 현상)

* 교통사고 사망률, 이혼율 상위권(출산율은 1.19명으로 꼴찌 수준)

* 청소년 정직지수(윤리의식)

2015년 12월 흥사단 투명사회운동본부의 조사에 의하면,

고등학생 중 56%가 '10억이 생긴다면 1년 정도 감옥 가겠다.'고 응답하는 등 청소년 정직지수는 해가 갈수록 악화되고 학년이 높아질수록 악화되고 있음.
(초등생 17%. 중학생 39%)

* 국제투명성기구의 부패인식지수(CPI)

2015년 우리나라는 56점으로 조사대상국 168개국 중 37위(OECD 꼴찌수준)

- 0 높은 사회갈등으로 인한 국가적 에너지 낭비(사회갈등 비용 1년 약 3조원)
- 0 사회갈등의 결과는 경제적 손실뿐 만 아니라 불신사회, 위험사회로 이행되면서 급격한 사회해체 현상을 초래함.(자살율, 교통사고 사망율, 이혼율 상위권)

* 최근 OECD의 '2014 더 나은 삶 지수'(Better Life Index)

- 11개 세부평가부문 항목 중 '시민 참여' 부문에 포함된 정부 신뢰도 평가에서 한국인의 23%만 정부를 믿는 것으로 집계(조사대상국 전체 평균인 39%에 크게 미달한 수치로, 36개 조사대상국 중 29위로 최하위권)
- '2016년 더 나은 삶의 질 지수(Better Life Index)'에 의하면, 한국은 조사대상 38개국 중 28위를 차지하여, 한국인의 삶의 질 지수는 2012년 24위, 2014년 25위 등 계속해서 하락하고 있음.
- 전반적인 삶의 질, 즉 직업·공동체·교육·환경·시민참여·건강·삶의 만족·안전·일과 삶의 균형 등 전체 11개 항목 중 9개에서 지난해보다 순위가 떨어졌음.
- 공동체의 결속도 “어려움에 처했을 때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친척, 친구 또는 이웃이 있다”고 응답한 사람의 비율은 75.8%로 멕시코 다음으로 낮았으며, 일할 수 있는 연령대의 26.4%만이 지난 1년간 공식적인 자원봉사에 참여했다고 응답해 OECD 평균보다 8% 가량 낮았음(공동체의 해체 현상)

5) 민주주의의 발전과 사회갈등의 증가

- 0 자유민주주의는 사상의 자유, 언론의 자유, 시장의 자유를 바탕으로 여러 이해가 상반되는 집단의 의사결정은 다수결 원칙에 의지할 수밖에 없는 제도이므로, 다수결에 패배한 집단은 근본적으로 불만을 가질 수밖에 없는 구조임.
- 0 따라서 민주주의 국가에서 사회갈등은 당연한 현상으로 받아들여야 함.

0 사회갈등 관리 및 '사회통합'의 적정한 수준

민주주의 국가에서 사회통합의 본질은, '적절한 불균형'이며, '적절한 불평등'이라는 주장이 있음.

'너무 불평등하거나 너무 불균형 상태가 되면 그 사회는 깨진다. 반대로 너무 균형이 잡혀 있거나 너무 평등하면 그 사회는 정체된다. 성장도 없어지고 발전도 없어진다.'(송복)

2. 경제위기 해소와 사회통합 방안

1) 사회통합을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나라의 경우 상대적 저소득층 및 생계를 위협하는 실업률의 증가에 따른 사회, 경제적 대책이 시급함.(경제민주화 내지 복지의 논쟁을 두려워해서는 안 될 것임)

* 2017년 다보스포럼 보고서에 의하면, 한국경제의 최대 위협 요인은 실업 문제임

(고용노동부 자료 : 2016년 말 한국의 실업자는 101만2천 명으로 실업률은 2010년 이후 최고치인 3.7%이고, 그 중 청년실업자(15~29세)는 43만5천 명으로 전체 실업자의 43%이며, 청년실업률은 9.8%이지만 체감 청년실업률은 22%에 이룸)

* 최근 기초생활수급대상과 차상위계층을 포함하여 생계문제가 시급한 하층민은 전체국민 5,000만명 중 약 700만명에 이룸(전체국민의 약 14%)

* 2011년 통계청이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국민의 45.3%가 자신이 하류층이라고 답하여 국민의 절반이 자신은 하층민이라 생각함.(중간층 52.8%)

더구나 소득이 있는 직장인과 자영업자들조차 자신을 하층민이라고 답했다는 것은, 교육과 직업에서 소외된 빈곤층에서 나타나는 자괴감을 직업도 있고 교육도 받은 평범한 국민도 다수가 느끼고 있다는 점에서 심각함.(가계부채의 증가 등 상대적 박탈감이 원인)

2) 사회갈등 관리 체제의 확립

- 갈등의 심화로 인한 불신사회와 위험사회의 도래 방지

- 정직을 바탕으로 한 사회구성원 간의 신뢰<사회적 자본(social capital)>의 축적과 협력관계 복원

* 사회적 자본 : 개인들 사이의 연계 및 이로부터 발생하는 사회적 네트워크, 호혜성과 신뢰의 규범(프란시스 후쿠야마)

* 'Trust' : 지속적 경제성장을 달성한 국가는 <신뢰>의 자본이 풍부한 국가

* 후쿠야마는 우리나라를 '신뢰가 부족한 <저신뢰 사회>'로 규정

* 실제로 우리나라의 '신뢰, 규범, 네트워크 등 3대 사회적 자본은 국제사회에서 바닥수준이란 지적이 있음

* OECD 35개 회원국 <사회적 신뢰도> 조사 '다른 사람들을 신뢰할 수 있는가' 우리나라는 긍정적 응답 26.6%(23위), 덴마크 74.9%(1위), 평균 36.0%

- ** 2016. 8월 현대경제연구원 조사 29.7% * 정치권이 가장 불신 대상
- * 사법시스템에 대한 신뢰도 27%(34개국 중 33위)
- 사회규범의 작동지수 86.6점(22개국 중 17위) * 일본 93.8점(1위)
- 사회네트워크 수준 ‘필요할 때 의지할 사람이 있는가’ 77.5%(35개국 중 34위)

- * 2016. 10월 대한상공회의소 ‘한국의 사회적 자본 축적실태와 대응과제 연구’
“신뢰, 규범, 네트워크 등 우리나라의 사회적 자본이 다른 OECD 회원국과 비교할 때 상당히 낮은 수준”이며, “한국경제 선진국 도약의 결핍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사회적 자본을 신(信)성장동력으로 활용해 한국경제의 저성장을 극복해 나가야 한다.”
- * 현재 27%인 한국의 사회신뢰도가 덴마크, 노르웨이, 스웨덴 등 북유럽 국가수준(69.9%)으로 향상되면, 경제성장률이 1.5%포인트 상승도 가능하므로 현재 2% 후반 성장률이 4%대로 도약할 수 있다고 함

* 사회적 자본을 토대로 제시한 신(信)성장경로 「신뢰자본 확충 → 규제 감소 → 기업가정신 고취 → 투자증가 → 경제성장」

- 노블레스 오블리제의 실천 : 존경받는 부자, 깨끗한 부자 상의 확립
- 정치, 사회적 지도층의 권위 회복
- 경직된 관료조직의 개혁 : 위에서부터 권한과 책임의 대폭적인 하부 위양

3) 규제개혁 : 사회 개혁의 전제로서 규제 개혁 및 ‘선별적 규제’ 활용

- * ‘작은 정부’, 정부기구 축소, 상속세 폐지, 법인세 등 세금 인하

4) 소통과 공감의 강화

- 인터넷, 젊은 세대 : 부정과 분노, 증오의 심리적 상처와 좌절 치유
- 21세기는 소통과 공감의 시대 : 머리에서 가슴으로(이성에서 감성으로)
- 소통과 대화를 통하여 ‘국민적 합의’나 ‘사회통합’이 가능할 것인가.
- 목표(방향설정) 자체가 다른 그룹과의 분리 대응이 필요함.

5) 공정사회(공평과 정의)의 열망에 대응 : 심리적 대응의 필요성

- 2016년 12월 기획재정부의 가계금융·복지조사에 따르면, 소득 5분위 배율(상위 20% 대비 하위 20%)은 2015년 기준 6.43배로 나타났음.(10분위 배율 약 8배)

- 2012년 현재 소득 상위 10%가 전체 소득의 45%를 차지하고, 이는 소득 불균형이 가장 심한 미국(소득 상위 10%가 48.16%를 점유)에 육박하는 수치임(일본은 40.50%)
- 이에 대하여, 세금 납부자를 중심으로 살펴보면, 납부자 중 상위 10%의 소득은 납부자 중 하위 10%의 소득에 비해 5.7배에 지나지 않지만, 세금은 766배에 이룸.(이는 대기업과 고소득자의 세금으로 나라 살림을 꾸리는데, 그 혜택은 전 국민에게 특히 가난한 사람들에게 많이 돌아간다는 것을 의미함.)
- * 우리 사회의 경우 중산층이 아닌 하층민 인식 62%, 희망이 없다 60%
- * 마이클 쉐넬(하버드대)의 공정성 조사 결과
미국은 62%가 공정하다는 인식, 한국은 74%가 불공정하다는 인식
- * 국민의 97%가 “나는 행복하다”는 부탄
2013년 기준 1인당 국민소득이 2,863달러에 불과하지만 세계에서 가장 행복한 나라 1위(국민소득이 부탄의 10배인 우리나라는 68위)
- * ‘국가의 경제력이나 국민소득이 국민 개개인의 행복을 담보할 수 없다.’

6) 사회통합 비용(갈등관리 또는 갈등해결 비용) 문제

7) 궁극적으로는 모든 사회갈등의 바탕이 되는 분단의 극복과 통일의 달성

3. 경제위기의 극복과 보수의 가치 실현

헌법의 기본원리 : 자유민주주의, 법치주의(법의 지배), 시장경제

- 1) 보수와 진보 등 진영의 구분에 따른 명칭이나 ‘구호’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님 : 올바른 가치관과 그 내용
- * 무엇이 가치가 있고 옳은 것인가, 무엇이 하지 말아야 하는 것인가

2) 지켜야 할 진정한 보수의 가치

0 개인적 가치

- (1) 근면, 성실, 겸손(계으름, 나태, 거만)
- (2) 청렴, 절약(부패, 낭비, 졸부)
- (3) 정직(허위)

0 공동체의 가치

- (1) 역사의 존중 : 국가(대한민국의 정통성), 통일과 평화의 추구
- (2) 국가, 사회, 가정 등 공동체 가치와 개인의 자유 조화 : 자유민주주의
 - * 국가안보 개념 : 국가적, 사회적 안보 질서의 확립(공익의 우선)

0 국가관, 역사관, 세계관

- (1) 일제시대와 건국의 평가
 - * 역사의 부정, 자학과 좌절의 역사관 “정의를 패배하고, 기회주의 득세”
- (2) 자학적 역사관의 배경
 - * 과거 독립운동 미화(폐쇄적 민족주의, 과도한 권위주의적 국가주의) 단계에서 재벌과 독재를 비판하는 도구로써 친일파 청산, 친일 연구 강조(좌파민족주의, 파괴적인 반국가주의)
 - * 친일파를 강조하는 자기비하의 역사
“국사를 배우면 건전한 국가관과 애국심의 함양이 아니라 국가를 경멸하게 되고 민족만을 앞세운다.”
- (3) 역사교과서, 역사교육의 이니셔티브 확립
 - * 대한민국의 정통성 부정, 전교조 등 좌파의 역사관, 역사학계, 일선 교사

3) 공화주의적 자유론 : “공동체의 이익을 우선하면서 개인의 자유를 최대화” 공동선, 시민적 덕성, 애국을 강조함

4) 복지구가 경향과 경제민주화(공정사회, 공생발전 등)를 어떻게 볼 것인가. 자본주의의 탐욕을 억제하기 위하여 ‘경제민주화를 두려워하지 말라’ * 변호사 형사사건 수임료 상한, 기부금 순위 공개, 노동자의 부당노동행위 규제

5) 보수 기득권층의 이기적이고 기회주의적인 태도 청산 * 가치관 중심의 연대와 솔선수범의 중요성(병역, 납세, 재산) 건전한 자본주의 교육에 의한 부에 대한 이중의식의 배경(허위의식) 청빈에서 청부로 : 자본주의 사회에서 바람직한 ‘지도자 상’의 확립 * 기득권 내려놓기는 누가 주도할 것인가 : ‘스스로도 가능한가?’

4. 경제위기의 극복과 법치주의의 중요성

0 사회통합의 밑거름이 되는 ‘사회적 자본’의 축적을 위해서는 기득권층의 솔

선수범에 해당하는 ‘노블레스 오블리제’의 실천도 중요하지만, 현대 민주국가에서는 보다 근본적으로 ‘법의 지배’ 즉 법치주의의 실현이 중요함.

0 한국경제연구원(사회적 신뢰의 요인)

사회지도층의 부패, 관료의 질, 법질서, 재산권 보호 및 경제적 자유

0 사회갈등지수와 법치주의

일반적으로 사회갈등지수(Social Conflict Index)의 공식은

$(((\text{지니계수} + \text{정치적 안정}) / 2) / ((\text{법치주의} + \text{정책의 효율성}) / 2))$ 로 계산됨.

* 법치주의가 사라진 북한의 장성택 사건(소통과 사회통합은 거의 제로 상태)

0 법치주의는 사회통합과 배치되는 개념이 아니라 통합의 상대방에게 승복할 수 있는 기준과 계기를 설정해 줌.

0 사회갈등을 조정하고 해소하기 위한 기준으로서 ‘법과 원칙’의 정립 및 이를 실천하기 위한 공권력의 권위 확보가 중요함.

0 협상이나 타협, 절충은 당사자 상호간의 양보와 승복이 전제되는데, 양보와 승복을 위한 합의(절충)의 기준 설정도 현대 민주사회에서는 궁극적으로 법이 제시할 수밖에 없음.(민사상 손해배상의 조정 및 중재, 형사상 Plea bargaining 제도)

* 법은 국민적 합의, 위임에 따라 사회의 정의를 구현하고 공동선을 지향하는 그 시대의 ‘시대정신’을 표상함.

* 법의 기준(법치)에 위배하면서 소통과 통합을 요구하는 것은 언어적 희롱에 의한 ‘이상향’의 추구에 불과함.

* 법의 수호 기관인 헌법재판소, 법원, 검찰, 경찰 등 사법기능의 권위 확보

* 독일의 경우 극좌파와 극우정당 등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반하는 움직임을 감시하는 임무를 가진 ‘연방헌법수호청’의 존재(국민의 저항권과 비교)

* Vito-cracy 내지 법에 대한 시민불복종 운동의 위험성(‘악법은 법이 아니다’라는 주장의 함정)

0 소통과 통합을 위한 법치주의와 교육의 중요성

* 시민은 18세기 시민혁명을 계기로 등장한 개념으로 절대왕정, 전제군주의 권력에 대한 저항과 개인의 권리, 자유를 강조하면서 학문적, 경제적으로도 상당한 엘리트에 속한 사람을 뜻함(현대적 의미의 민주국가가 탄생하기 전의

정치집단)

* 이에 대하여, 국민은 19세기 이후 국민국가를 거쳐 현대 민주국가에서는 국가를 이루는 인적 요소로서 국가의 통치권에 복종할 의무를 가진 개개인의 집합체를 의미하고, 국가적 질서(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전제로 한 법적 개념임.

0 따라서 국민교육은 개인의 권리와 자유에서 더 나아가 국가질서 속에 국민으로서의 교양과 품격, 윤리와 의무를 강조하는 교육이어야 할 것임.(정치적 참여와 저항을 강조하는 개인주의적 시민교육과 비교)

5. 결론

0 우리 사회의 여러 가지 갈등 중에서도 특히 분단에 따른 이념갈등이야말로 모든 갈등의 뿌리이고 사회통합의 가장 큰 저해요인이 되고 있음.

0 또한 이념갈등은 남북 분단체제가 기원이며, 상호 양보할 수 없는 제로섬 갈등임.(자유민주체제와 공산독재체제의 극단적인 대립)

‘우리나라의 정체성마저도 공유하지 못하는 집단에 대해서는 ‘통합’이라는 명분상의 허울보다는 실질적 내용으로 ‘법치’를 앞세워야 한다. 이들 집단의 내면적 목표는 그들의 선전과는 달리 ‘사회통합’이 아니라 ‘사회갈등’임을 직시해야 한다. 어설피고 감상적인 소통과 공감의 주장, ‘사회통합’의 논리는 이들 집단에 사회갈등의 토양을 제공할 뿐이다.’

‘사회통합에는 배제의 논리도 포함되어야 한다. 통합이라는 명분으로 모든 개인이나 집단을 용인할 수는 없다. 공동체의 역사, 우리 체제의 정당성, 헌법을 인정하지 않는 개인이나 집단은 통합의 대상이 될 수 없기 때문이다.’

‘코로나19’사태의 극복과 사회경제의 안정화 방안
- 의료적 관점 -

박 종 훈
고려대 안암병원장

요 약

코로나 19라는 신종 바이러스의 출현은 이제 대한민국 뿐 아니라 세계를 집어삼키고 있다. 메르스 사태를 경험한 지 얼마나 지났다고 대한민국은 이번에도 우왕좌왕한다. 메르스 사태 이후 많은 전문가들이 분명 메르스 바이러스처럼 전혀 경험해 보지 못한 신종 바이러스는 수 년 뒤에 또 우리를 찾아 올 것이라는 점을 강조한 바 있다. 그리고 그러한 상황에 맞게 우리의 방역 및 의료체계의 변화를 촉구하기도 했다. 지금에 와서 보니 메르스 사태 이후 보건복지부 장관을 의사 출신으로 딱 한번 임명했던 것 말고는 아무런 변화도 없었음이 이번에 알게 되었다. 시스템의 변화는커녕, 정치인들의 행태 또한 전혀 변화된 것이 없었으니,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는 사실 인재라고 보는 것이 맞을 것이다. 메르스 사태가 가벼웠던가? 아마도 그랬나보다. 그 정도쯤이야 충분히 무시해도 되는 수준이었나 보다. 그러기에 메르스는 명함도 못 내미는 아주 이상한 코로나라는 놈이 출현해서 대한민국 경제는 물론이고 세계를 집어삼키고 있다. 코로나로 죽는 게 아니라 굶어죽겠다는 농담이 현실이 되고 있다. 과연 이처럼 충분히 예견된 일들에 어처구니없이 당하고 매번 국민들의 자발적인 노력으로 극복해야만 하는 일들이 반복되는 이유는 무엇일까? 나는 감히 말하건 데 전문가의 의견이 존중되지 않는 우리 사회, 우리 정치행태의 문제라고 지적한다.

코로나 19라는 신종 바이러스의 출현을 처음 접하던 1월경에는 대다수의 사람들은 이것을 단순한 중국 내에서 발생한 우발적인 현상에 그치는 것으로 여겼다. 물론 당시에도 우려를 했던 학자들은 있지만 말이다. 그러던 것이 2월에 접어들면서 산발적으로 중국, 특히 우한 지역을 다녀온 적이 있거나 그 쪽 지역을 거쳐 온 사람을 접촉한 사람들 사이에서 감염자들이 출현하더니 급기

야는 2월 15일에 전혀 예상치 못한 이력을 가진 환자가 토론자가 근무하는 고대 병원 응급실에 나타났다. 그리고 이것이 지역사회 감염의 신호탄이었다. 2월 초부터 중순까지 전문가 단체는 적극적인 중국인 입국 차단을 촉구했지만 여러 가지 이유로 정부는 난색을 표했고, 10일을 전후로 확진자가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자, 대통령까지 나서서 위축된 경기를 부양하고자 더 이상의 경계는 필요 없다는 취지의 말을 했다. 성급했던 것이다. 아니나 다를까. 그 다음 주에 대구에서 폭발적으로 확진자가 나타나면서 대한민국은 그야말로 쑥대밭이 되고 말았다.

수년전 메르스 사태를 겪으면서 대한민국의 방역체계, 의료체계가 매우 부실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았다. 분명 메르스 사태 후 많은 긍정적인 변화가 있었을 것이라 생각을 했었다. 최소한 똑같은 우를 범하지는 않을 것이라 생각을 했었다. 그런데 너무 쉽게 메르스가 해결되었던가? 메르스 사태를 겪으면서 경험적 지식은 가졌으나 시스템의 변화까지는 이끌어 내지를 못했다. 분명 당시에도 많은 전문가들이 반드시 수년 안에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 새로운 변종 바이러스가 출현한다는 것을 주장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가상의 소설이나 영화에 나오는 정도로만 여긴 것이 아닐까? 아니면 그래봤자 우리는 극복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한 것일까? 코로나19를 겪고 있는 대한민국은 이런 사태가 처음인 나라처럼 우왕좌왕 그 자체다.

모든 것이 멈췄다. 모든 모임이 취소되고, 경제는 얼어붙었다. 항공기는 공항에 서 있고 호텔은 텅 빈 상태다. 주가는 폭락하고 그야말로 바이러스에 감염되어 죽는 게 아니라 굶어죽겠다는 말이 절로 나온다. 한 나라에서 시작한 신종 바이러스는 순식간에 전 세계인들을 감염시키고 있다. 이제 코로나 사태는 중국, 한국, 일본의 문제가 아니라 유럽과 미국마저도 뒤 흔들고 있다. 눈에 보이지도 않는 바이러스가 전 세계를 마비시키고 있으니 기가 찰 일이다. 세계가 한 지역화 되어 있음이 느껴진다. 한꺼번에 세계 경제가 무너지고 있는 이런 현상은 세계 대전이 아니고서는 발생하기 어려운 일일 아닐까?

누누이 강조한 바 있다. 모든 문제에 앞서 앞으로는 의료가 문제가 될 거라고. 물론 그 때의 의료는 이런 상황과는 다소 다른 이야기지만 궁극적으로는 생명과 관련된 의료적인 문제가 국민에게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화두가 될 것이라는 지적이었다. 그리고 이제 어떠한 여건 속에서도 굳건하던 정권도 눈에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에는 발목이 잡혔다. 그도 그럴 것이 국민은 불안에 떨고 경제는 바닥을 치기 때문이다.

당연한 말이지만 코로나 사태는 결국은 해결될 것이다. 착각하면 안 된다. 인간이 이기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물러가는 것이다. 메르스? 우리가 극복했다? 착각이다. 바이러스는 절대로 첫 번의 전쟁에서 인간에게 승리를 양보한

적이 없다. 광풍이 휩쓸고 지난 뒤에야 곁을 내 준다. 이번 사태가 진정되고 나면 또 수 년 안에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 변종 바이러스가 출현할 것이고 그 놈은 또 어떠한 무기를 장착하고 우리에게 칼끝을 겨눌지 아무도 모른다. 세계 경제 몰락이 아니라 인류가 몰살당할지 누가 알겠는가?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시스템이 중요한데, 글썄. 지금까지의 경험으로 본 다면 그것은 요원한 일이 될 것이고 또 비싼 수업료를 낼 것이다. 물론 그 때도 우리가 극복했다고 하겠지만 소탐대실의 역사는 왜 이 나라에서는 반복되는지 모를 일이다.

‘코로나19’사태의 극복과 사회경제의 안정화 방안
- 경제일반 관점 -

송 정 석
중앙대 경제학부 교수

요 약

- 2019년 들어 악화된 국내 경제상황 속에 코로나19 감염확산은 실물경제 위축과 금융시장 충격으로 작용함.
- 이는 내수 경제를 위축 뿐 아니라 주요국 경제에 충격으로 작용, 대외의존도가 높은 한국 경제의 위협요인임.
- 재정지출 확대에만 의존하기보다 금리 선제적 인하와 향후 4월 총선 후 경제정책을 정책불확실성 제거와 경제주체 갈등 해소로 선회할 필요가 있음.

○ 현재 상황

- 코스피는 6일 2% 하락, 미국 뉴욕증권거래소(NYSE)에서 다우지수와 S&P500은 1987년 이래 최대로 폭락했으며, 영국의 주요 증시 지수도 전날 대비 10% 이상 떨어져 1987년 이래 최악의 낙폭을 기록
참조) 2020. 3. 13 일자 BBC 뉴스
- 뉴욕대학 루비니(Roubini) 교수는 지난 2018년 당시, 2020년까지 과거 2008년 금융위기 수준의 위기를 예측하면서 소위 Perfect Storm에 비유
참조) 2018. 9.14 일자 msn 뉴스
- 이번 코로나 19 사태는 루비니 교수가 예측했던 위기상황을 더욱 심각하게 몰아가고 있으며, 2008년 금융위기의 경우 금융부문이 실물부문에 영향을 미쳤다면, 이번 코로나 19 확산은 실물부문 충격이 금융시장 충격으로 번지는 상황
- 또한 인명 피해, 입국제한 관련 국가 간 갈등을 고려할 때 이번 사태는 사회회적 비용이 2008년 금융위기 못지않은 것으로 판단

○ 국내 경제상황

- 소득주도성장 정책, 최저임금 인상, 주 52시간 근로시간 등 현 정부의 경제

- 정책에도 불구하고 국내 경제는 이미 자영업 부문을 시작으로 위축되었음
- 또한 2019년 중 부동산 시장에 대한 초강도 수요 억제 정책 역시 특정 지역의 부동산 시장 가격을 단기적으로 안정화 시켰으나, 여타 지역에 대한 주택 가격 풍선 효과 및 장기적 측면에서의 가계 부채 부실화 등 위험 요인이 존재함

○ 대외 환경

- 일본의 한국에 대한 화이트리스트 배제, 한국의 반일 정서 확산에 따른 일본 제품 소비 급감 이후 양국 교역관계 역시 급속히 냉각
- 반면 한국의 대중 경제의존도는 구조적으로 여전히 높으며 특히 2019년 본격화된 미중 무역마찰에 따른 중국의 중간재 수요 감소는 중국으로의 중간재 주요 수출국인 한국 수출에 타격을 줌
- ※ 주요국의 자국 중간재 수출 중 대중 수출 비중은 2014년 기준, 한국(68.7%), 일본(65.1%), 대만(78.5%), 독일(46.6%), 미국(59.3%)로 한국은 중화권 경제인 대만을 제외할 때 가장 높음.
- 참조) 2019년 트레이드포커스 21호,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

○ 향후 전망

- 이번 코로나 19 감염확산은 한국경제 국내요인만으로도 최소한 2020년 상반기까지 악재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아 보임
- 한편, 이제 감염이 확산되기 시작한 미국, 유럽의 향후 진행 추이에 따라 대외경제의존도가 높은 한국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올해 3~4분기까지 지속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음

○ 주요 점검 사항

- 더 이상의 소비심리 위축을 막아야 하며, 소비심리 회복 없이 추경예산 등 재정확대 정책만으로는 실효성이 낮으며, 재정지출 확대는 기존의 막대한 가계부채 비중과 함께 조만간 국가경제에 큰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음.
- 한편, 발제 자료에서 제안한 바와 같이 금리인하를 논의할 시점으로 보임
- ※ 2019년 들어 국내 소비자물가인상률이 다시 1% 대로 하락함에 따라 디플레이션 우려가 제기되는 현 상황 하에서 실질금리를 고려할 때 (명목)금리인하를 추가적으로 단행할 여력이 있다고 판단됨.
- 이번 코로나 사태를 계기로 4월 총선 이후 경제정책 기본방향을 정책불확실성의 제거 및 경제주체의 갈등구조 해소를 중심으로 선회할 필요가 있음.

현금 살포가 아니라 산업생태계 도산 방지에 역점을 뒀야

정 인 교
인하대 국제통상학과 교수

오정근 교수님의 발표 내용에 공감하며, 토론이라기 보다는 그동안 생각했던 몇가지 사항을 정리하고자 한다.

정부가 제안한 11.7조원의 추가 예산은 조만간에 국회가 승인할 것으로 보이지만, 이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극복을 위한 추가 예산 원에 비하면 턱없이 작은 편이다. 11.7조원은 GDP 0.2%p를 지지하는 수준이며, 최소 40조원을 풀어야 효과를 볼 수 있다고 상공회의소는 주장하고 있다. 추가 예산의 규모 못지 않게 어떤 분야에 어떻게 집행할 것인가가 중요할 것이다.

몇몇 지자체장들을 중심으로 국민 일인당 일정액의 현금살포를 주장하고 있다. 한마디로 헬리콥터머니를 뿌리자는 것인데, 오는 4월 총선과 무관하지 않으며 전형적인 포퓰리즘이다. 예산 확보도 중요하지만, 그 재원을 생산적으로 사용해야 한다. 코로나19로 직장을 잃었거나 수입원이 끊힌 가구에게 지원해야 하지만, 일시적인 현금 흐름 이상으로 산업생태계가 붕괴하고 실업이 양산되는 것을 막는데 긴급편성된 예산을 투입해야 한다. 산업생태계가 필요로 하는 대책을 제시하고 정책의 타이밍을 정확하게 맞추어야 한다. 예산 집행의 병목현상도 완화시켜야 한다. 재정 지출 확대 못지 않게 규제완화로 대기업의 신산업 투자 여건을 개선해 주는 방안도 모색되어야 한다. 또한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한 이후 산업정책을 수립하고 산업구조조정을 원활하게 할 필요가 있다.

한국 경제당국은 외환시장 등 거시경제 안정에 정책적 노력을 기울여야 하나 마스크 수급 해결에 행정력을 쏟고 있을 뿐 기획재정부의 역할이 잘 보이지 않는다. 보건복지부가 감염병 방역에 집중하고 나머지 경제통상 부처는 경제 악화를 최소화하며 산업기반이 훼손되는 것을 줄이는데 집중해야 한다.

특히 경영상황이 어려워진 기업들이 폐업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시급하다. 지금까지 수익을 내던 멀쩡한 기업들이 코로나19 확산으로 갑자기 수익이 줄어들었으나, 임대료, 인건비, 각종 세금과 사회보험료 등 사실상 고정비를 부담해야 한다. 코로나19 위기가 장기화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고정적으로 지불하게 되는 비용 중 정부가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세금과 보험료 지불을 일정기간 유예하는 조치가 더 시급하고 효과가 클 것이다. 정부는 현금 살포만 논의

할 뿐 모든 중소기업이 의무적으로 부담해야 하는 비용을 완화해주거나 일시적으로 standstill하는 점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지난주 사상 초유의 급락을 보였던 세계증시가 지난주 금요일 미국과 유럽을 중심으로 반등하였으나 어제 월요일 아시아 증시는 급락을 멈추지 않고 있다. 그만큼 코로나19로 인한 글로벌 위기가 아시아 국가에게 더 큰 리스크가 되고 있다는 의미이다. 글로벌가치사슬에 깊이 관여되어 있고, 상품과 인적 이동이 막히면 경제활동이 크게 지장받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감염병 관리를 위해 입국을 제한하는 것은 필요하나, 경제활동이 중단되지 않도록 꼭 필요한 비즈니스출장이 가능하도록 주요국과의 출입국 협력을 통해 출장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우리나라 금융시장은 리스크에 매우 취약하다. 미국 내 코로나19가 급속히 확산되어 금융시장 불안과 실물경제 충격이 클 경우 글로벌 달러 조달시장이 경색될 수 있다. 과거 경험으로 보면,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은 가장 먼저 달러가 대량으로 유출되곤 했다. 2020년 3월 13일 현재 4,290억달러의 외환보유고(세계 9위)를 갖고 있으나, 경제규모를 고려하면 넉넉한 편이 아니다. GDP가 한국의 1/3 수준인 대만은 한국보다 많은 약 4,800억달러를 보유하고 있다. 미국 및 일본과의 통화스와프 체결이 필요하다. 일본과의 정치적으로 대립할 것이 아니라, 미래지향적으로 관계를 재설정하고 통화스와프 체결에 나서야 한다. 세계 금융시장 안정을 위해 미국에서도 통화스와프 확대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2008년 위기시 한미 통화스와프가 결정적인 도움이 되었다. 우리나라는 미국을 설득해 통화스와프를 조기에 체결해 외환 방어막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정부의 지원에도 불구하고 많은 기업들이 부도를 맞을 수 밖에 없는 현재의 상황을 산업당국은 미래지향적으로 우리 산업구조를 업그레이드 및 구조조정하는 기회로 활용해야 한다. 한국 GDP의 30%가 투자에서 창출된다. 이는 미국 10%대, OECD 평균 20%보다 훨씬 높다. 내수가 크게 위축된 상태에서 투자를 늘리지 않으면 일자리 창출과 경제성장을 기대하기 어렵다. 한국은 대기업에 대한 많은 규제를 적용하고 있어 신산업에 대한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정부가 예산으로 저임금 일자리를 만들어내려고 할 것이 아니라 투자환경을 개선시켜 기업이 나서서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도록 유도해야 한다. 최저임금 인상, 주당 52시간 근로 등 노동시장 규제도 합리적으로 조정해야 한다. 금융 지원보다는 노동시장에 대한 규제 완화가 더 시급하다고 하소연하는 기업의 목소리에 정부는 귀를 기울여야 할 것이다.



서울시 마포구 마포대로 196, 고려아카데미텔

Tel : 02-741-7660~2

<http://www.cubs.or.kr>